

# 여야 '패스트트랙 처리' 동상이몽

### 3당 교섭단체 실무협의...공수처·수사권 조정 견해차 민주 "한국당 빼고 추진" 압박...한국당 '불가론' 반복 군소야당 공동회견... 선거법 先처리 공동 대응 방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놓고 여야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놓고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등 군소야당도 처리 시기와 순서, 법안 내용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은 교섭단체간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 복원에 돌입, 한국당을 빼고 정국 돌파에 나서겠다는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당장 돌파구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정국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

당 권은희 의원 등 검찰개혁 법안 실무논의를 담당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의원들은 23일 실무협의를 갖고 핵심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선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각당의 극명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검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드러냈다. 다만 각당의 우려지점 및 보완책·중재안 등 마련에 나서기로 하는 등 협상 여지는 남겨 놓았다. 세 의원은 이날 협의를 토대로 당내 조율 작업 등을 거쳐 오는 30일 재차 협의를 갖고 답판을 시도하기로 했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실무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 대해 "(각당 원

내대표까지 참석하는) 3+3회동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필요한 얘기들이 오갔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라며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공수처 설치하는 기본적으 반대라고 의사표시를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처음부터 반대해서 실질적인 협의는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조금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다른 부분이 타협된다면 아마 공수처에 대해서도 한국당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꿀 경우 내용을 토대로 당내 조율 작업을 거쳐 오는 30일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공수처를 "정권 보위부"라고 주장하고 있는만큼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에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교섭단체간 협상 이후 군소야당과의 접촉에 본격적으로 나설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물 밑 접촉을 통해 '선거법 처리 보장'을 전제로 공수처법 우선 처리 문제를 군소야당과 협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카운트다운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에 맞춰 저지 총력전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선 공수처 성격을 '문재인 정권 보위부'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여론을 결집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다. 한국당은 시민단체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가 주최하는 2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선(先)처리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여야 선거제 개혁안 논의 시작

### 교섭단체 3+3 회동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3일 선거제 개혁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절충점 모색에 나섰다. 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참여해 '3+3' 형식으로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였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각 당 대표의원인 김중민(민주당)·김재원(한국당)·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이 회동에 참석했다. 선거제 개혁안을 의제로 다룬 첫 3+3 회동인 만큼 탐색전의 성격을 띠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모색해보는 자리로써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접점 얘기를 할 때는 아니고 합의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서로 진솔한

얘기를 하는 자리였다"고 언급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각 당 입장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며 "상대방 입장을 반박하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253석~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47석~75석)을 늘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10%(30명) 줄인 안을 당론으로 제시했다. 각 당 입장을 놓고 탐색전을 끝낸 여야 원내대표들은 추후 입장을 공개하지 않고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음 만남은 비공개로 할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 저희끼리 좀 편하게 한번 만나볼 것"이라고 답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의 체계·지구 심사를 거친 뒤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이준석 "孫, 당비 대납" vs 손학규 "심부름"

### 바른미래 비당권파 의혹 제기...당권파 "헛발질" 비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23일 손학규 대표의 당비를 다른 당원이 부담했다는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변혁 측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의원 비상회의'에서 "2019년 1~7월 7차례에 걸쳐 손 대표의 당비 1천750만원을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과 다른 당원 이모씨 등이 번갈아 가며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비 납부 기록을 공개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정치자금법, 정당법, 형법의 배임수증죄로 매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선관위에 조사되셔서 제출하고, 규명이 안 될 경우 수사기관 등에 추가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 대표 측은 변혁이 임 전 부총장의 당비 납부는 대납이 아닌 '심부름'에 불과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손 대표 측 장진영 비서실장은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임 전 부총장이 다른 당직자의 당비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대표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본인이 제때 맞춰 (대신) 내고 손 대표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헛발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납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모씨는 손 대표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동아시애틀리제이션의 개인비서라며, 이씨가 임 전 부총장에게 한 달 당비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여러 차례 입금한 은행 기록을 언론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토론회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가 열렸다. 오른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대안신당 장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 김중민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연합뉴스

# "인사청문회 도덕성·정책 검증 분리해야"

### 한국당 빠진 여야,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인사청문회 도덕성·정책 검증 분리 실시와 청문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전·현직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지낸 대안신당 장병원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민주당 김중민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된다'를 주제로 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비롯해 그동안의 인사청문회가 과도한 '신상털기'로 진행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만큼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 분리 실시 등 제도를 재정비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김중민 의원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현 인사청문회는 윤리성 검증을 넘은 '신상털기'이자 정쟁 중심 청문회"라며 "청문회를 비공개 윤리성 검증 청문회와 공개 업무능력 검증 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비공개 청문회 결과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별도 기재하도록 하자"고 제안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리성 검증 청문회를 우선 실시하고 정책역량 검증을 실시하되, 윤리성 검증은 경찰청과 국제정보, 감사원 등 전문기관 공무원을 파견받아 조사하도록 해 그 내용을 보고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현직 원내대표들도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 실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요즘에는 장관을 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는 세상이 됐다"며 "(인사청문회)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국가적인 소모 과정이 돼 문제"라고 아쉬움을 털어냈다.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능

력 있는 사람이 사소한 도덕성 검증에 휘말리는 것을 보면서 (예비 공직 후보자들이) '망신당할 텐데 하지 말아야겠다'고 고사해 1류가 아닌 2류, 3류가 장관직을 수행한다"며 "그러다 보니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장병원 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현 인사청문회는 제도 취지를 넘어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모했다"며 "도덕성과 정책 역량 검증 분리, 청문보고서 채택 강제화, 명확한 도덕성 검증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윤리성·도덕성 문제와 정책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실시하고 청문 기간도 늘려야 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반드시 채택하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전두환 사후에도 미납 추징금 환수"

### 천정배 '불법 재산 끝장 환수법' 발의

대안신당 소속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 을)은 23일 전두환 씨가 사망한 후에도 미납 추징금을 추징·몰수할 수 있는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면 추징과 몰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천 의원은 "현재로서는 전두환씨가 사망

하면 새롭게 발견된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불법 재산이 전두환 후손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 측에서는 법안을 '전두환 사후 불법 재산 끝장 환수법'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MODERN (트윈스틸)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